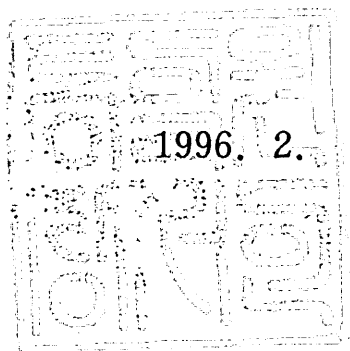


# 96年度 主要政府施策



統 一 院



# 目 次

- 歷史 바로세우기
  
- 金大統領, ASEM會議 參席 및 인.싱가폴 訪問
  
- 6大 國政運營課題 實踐內容
  
- 對北 食糧支援 問題에 대한 政府立場



# 歷史 바로세우기

## 1. 『歷史 바로세우기』란 무엇인가?

- 「역사 바로세우기」는 「나라」 바로세우기임과 동시에 「미래」 바로세우기이다.
- 「역사 바로세우기」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하여 현재의 잘못된 점을 고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 발전지향적인 민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며, 그러한 민족이 오늘의 선진국을 이루었다. 프랑스는 제2차세계대전후 수많은 親나치 동조세력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였으며, 독일도 한시대의 주역이었던 전범들을 단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에도 중국본토를 모택동에게 내준후 과거의 부패세력들을 단죄함으로써 오늘의 부유한 대만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 2. 『歷史 바로세우기』는 왜 필요한가?

-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의식 측면에서 많은 과오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잘못은 「비정상」과 「불합리」를 사회적으로 구조화 시켰다. 5·6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웅변하는 것은 정통성이 결여되면 사회적 왜곡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역사의 굴절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 정치적으로 탈법과 불의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유보했던 권위주의적 권력은 민주발전의 지체를 가져왔으며, 그 대표적이 정경유착에 의한 관권·금권선거의 실시였다. 경제적으로도 특혜와 투기로 不勞所得을 만연시키고, 富와 소득구조를 왜곡 시킴으로써 맘몰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지 않은채, 전도된 가치관을 갖고 다음 단계로의 행진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우리 미래는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無規範의 혼돈에 빠질 것이며, 우리 경제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미래 발전에의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역사의 과오를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民族正氣와 가치관을 재확립하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국민 모두가 문민정부에게 바라는 열망이기도 하다.

### 3. 『歷史 바로세우기』는 어떠한 方向으로 추진되나?

-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세계화·정보화라는 인류 문명사적 변화에 적응하고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 1단계 「변화와 개혁」 :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기반의 형성」
  - 우선 공동체적 기반의 확립을 위해 司正을 통한 깨끗한 정부의 실현
  - 정치자금 不收受 선언, 軍개혁,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
- 2단계 「변화와 개혁」 : 「세계화 개혁」
  - 세계를 향한 주체적 참여를 위한 국가내부역량 강화
  - 경제성장 중심에서 정치·경제·문화·윤리·예술등 모든역량 결집
  - 안보리 이사국 진출 등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제고

o 3단계 『변화와 개혁』 : 『역사 바로세우기』

- 『역사 바로세우기』는 국민과 함께 과거를 청산하여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자는 21세기를 향한 개혁이다.
- \* 『역사 바로세우기』개혁은 1,2단계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행할 수 있게 되었음.
- \* 당초 잘못된 구조는 혁파하되, 처벌은 역사에 맡긴다는 판단이었으나 금융실명제 등의 성과로 과거의 엄청난 불의와 비리가 노출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이 용납을 않게됨.
- \* 친일세력에 훼손당한 民族正氣를, 군사독재 권력에 의해 타락된 민족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국민의 열망이자 이 시대의 과업임.

4. 『歷史 바로세우기』를 하면 어떠한 效果가 있는가?

바로 세워진 역사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o 『역사 바로세우기』는 미래를 세우는 과정이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청산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탈법과 불의의 문화를 준법과 정의의 문화로, 부정직과 비합리를 정직과 합리로 대체하고, 개발독재 시대에 만연한 성과주의, 편법주의, 졸속주의, 한탕주의를 뿌리뽑는 과정이다. 그런 기반위에서 사회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國家競爭力』이 생긴다. 그러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바로 세운 역사위에 높은 『삶의 質』이 확보된다.

- o 현대사 50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뤘은 역사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역사속에는 국민간의 깊어진 분열과 갈등도 같이

들어있다. 피해와 왜곡으로 입은 상처를 우리 민족이 함께 치유하여 새 살이 돋게 하여야만 우리민족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래야만 대화합을 위한 화해와 관용도 가능해진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바로 이 분열과 갈등을 딛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업이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은 그 국가에 대해 일체감을 느낀다. 국가에 대해 일체감을 느낄때 그 국민의 『삶의 質』은 높아진다.

## 5. 『歷史 바로세우기』는 『過去의 잘못』을 청산하지는 것이지, 『過去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역사 바로세우기』는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의 탈법 행위에 대한 응징이고 청산이지, 과거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5·6공이 비록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었다고 하나, 그 시대도 국민이 살아온 정권이다.. 과거에도 진보는 있었다. 오욕의 역사도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이다.
- 또한, 국토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 군인들이나 5·6공 정부의 공직자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독재권력하의 어둠속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땀흘려 일했기에 그 많은 시련을 딛고도 우리는 사회를 성숙시키고 선거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하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
- 『역사 바로세우기』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였던 개혁을 사실상 국민에 의한 개혁으로 전환하는 轉機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자기가 속한 사회 각 부문의 모순을 바로잡는 노력을 다할때, 비로소 『歷史』가 바로서고 『未來』가 바로서는 것이다.



# 金대통령, ASEM회의 참석 및 印·싱가폴 방문

## 방문일정 및 기대성과

### ○ 방문일정

- 2월24일 ~ 2월26일 : 인도 국빈방문
- 2월27일 ~ 2월29일 : 싱가포르 국빈방문
- 2월29일 ~ 3월 4일 : ASEM 정상회의(태국, 방콕)

- 金대통령의 이번 인도·싱가폴 순방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韓·EU간 실질 협력관계 등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킴으로써 金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과제의 하나로 밝힌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

## 1. ASEM 회의 참석

### ASEM 개관

- 명 칭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 ASEM)
- 참가국 : 총 25개국(아시아 10개국, 유럽 15개국) + EU 집행위
- 회의주제 : 더 큰 성장을 위한 아시아-유럽의 동반자 관계  
(Asia-Europe Partnership for Greater Growth)

## □ 참가의의 및 기대성과

### ○ 신뢰와 협력의 신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

- 아시아 및 유럽 26명의 정상간 회동을 통해 아시아-유럽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함.
- WTO 등 다자간 세계무역질서를 강화하고 배타적 지역주의 추세의 완화를 통해 신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기여함.

### ○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실리 모색

- EU와의 정치적 협력을 통하여 안보환경 개선과 EU의 KEDO 참여확대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충함.
- 韓-EU간 및 韓-ASEAN 간의 실질협력 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함.

### ○ 한국의 중간자적 역할 기대

-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미묘한 입장에 있는 중국, 일본 보다는 중간적 입장의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2. 인도 국민방문

- 라오 총리(91년 취임)의 경제자유화정책에 힘입어 양국간 교역이 급성장하고 우리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실질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金泳三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對 西南亞 개척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인도는 9억의 인구와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비동맹 주도국이며 서남아시아 최대국으로 UN 등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金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21세기에 들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의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지역에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며
  -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한의 개방유도와 관련해 인도의 협력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3. 싱가포르 국민방문

-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로 의식과 제도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일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그동안 한국과 싱가폴은 경제, 통상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왔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음.
  - 95년 양국 교역량은 85억불(우리나라의 對 싱가폴수출은 65억불, 수입은 20억불)
- 싱가폴은 동남아시아의 금융, 물류, 다국적 기업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 양국 지도자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한층 심화, 발전시키고 경제선진화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장점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임.



## 6大 國政運營課題 實踐內容

1. 南北關係改善 努力
2. 先進經濟의 기틀 確立
3. 核心課題의 持續的 改革
4. 삶의 質 向上을 위한 生活改革
5. 社會 間接施設의 擴充
6. 世界秩序創出에 能動的으로 參與



# 1. 南北關係 改善努力

## (1) 남북 화해와 협력증진 방안

북한 사회의 개방화를 통한 남북간 평화 공존체제 구축이 당면목표이다. 북한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수로(輕水爐) 공급협정의 후속조치 이행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신중히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 차원에서 협조, 지원할 계획이다.

미·일 등 우방과의 공조체제 및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개방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북한의 대남(對南)태도 변화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전달한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다.

## (2) 통일교육 강화 방안

현재 우리 사회는 통일 '환상론' 과 '비관론' 등 바람직하지 못한 통일논의로 인해 균형적 여론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과 실질적인 통일준비 태세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하는 한편, 대학의 통일문제 연구활동 및 북한학(北韓學) 강좌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교육 연수기관의 통일교육 기능확대 및 관련 교수 요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 현실과 북한 실상에 대한 새로운 감각의 첨단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이슈 발생시 정부의 입장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학자·전문가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중심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한다.



### (3) 안보태세의 확립

도발적 위기 및 모험적 도발에 대비,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한다.

위기관리 및 국지(局地) 도발 대비태세를 높이고, 전면전 수행태세의 유지, 독자적 작전태세의 구축, 한·미연합 방위태세 발전 등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한다. 안보 전문집단으로서의 군 본연의 위상 정립, 확고한 대적관(對敵觀) 확립,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가치관 제고 등 장병의 정신전력을 강화한다.

엄정한 지휘계통과 위계질서의 확립, 강인한 교육훈련 및 단결심 고양, 병영생활 여건개선, 직업안정성 보장 등으로 군기를 확립하고 사기를 고양한다.

예비군 관리체계 개선, 적시적(適時的)·효율적 동원 보장, 효율적 전시 군수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군수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을 위해 정전(停戰)관리 기구의 무실화 대책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협상 및 군비통제 대비체제의 유지 등 능동적인 대북 군사정책을 추진한다.

또, 한·미 안보 협력관계의 발전과 군사외교의 다변화를 기하는 한편 한·미연합 억제력을 강화하고 군사공조(共助) 체제를 유지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주변국 군사관계를 구축한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도 참여한다.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국방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21세기 국방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21세기 국가 발전전략과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개발, 군 구조 개선, 혁신적 국방운영체계 발전에 주력한다.

국방분야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의 역할을 높여 나갈 것이다.

시대적 소명에 부응, 자랑스러운 신국군상(新國軍像)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 바로세우기'에 적극 참여해 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신뢰회복의 기회로 인식토록 하여 올바른 국군상을 정립한다.

국민 편익증진과 국민을 위한 국방정책 구현으로 민군(民軍)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시킨다.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방재원(財源)의 제한을 극복한다.

## 2. 先進經濟 기틀確立

### (1) 4.5% 내외의 물가안정 대책

'97-98년에 선진국형 저물가(低物價) 구조(3%대)의 정착을 목표로 물가안정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다. 수입자유화 등 수입개방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격파괴 현상 등 세계적인 유통혁신의 조류가 국내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 위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정보를 확충한다.

'96년 소비자 물가를 '95년보다 낮은 4.5% 내외에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도 분산조정하여 불필요한 물가 불안심리의 발생소지를 없앤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협 계약재배 사업의 확대, 부족물량의 적기수입 등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직거래와 저가할인 매장 개설을 늘려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계약재배 품목의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비를 1,000억원('94년 625억원)으로 늘리고 부족물량의 조기수입과 필요시 물량확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농협창고 시설을 활용한 저가

할인 매장(하나로 클럽)의 개설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축소, 병행수입 허용 등 경쟁을 촉진시켜 공산품 값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개인 서비스 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정한 물가관리 품목의 책임 관리체계를 통해 안정을 도모토록 한다.

## (2)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방안

중소제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96년중에 당초계획보다 1조원이 늘어난 총 2조원 규모의 구조개선 자금을 약 6,000개 업체에 지원한다. '97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원절차도 간소화하여 1/4분기 중에 대출추천을 끝내는 등 지원확대와 함께 조기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립중인 '자동화센터'를 3월중에 개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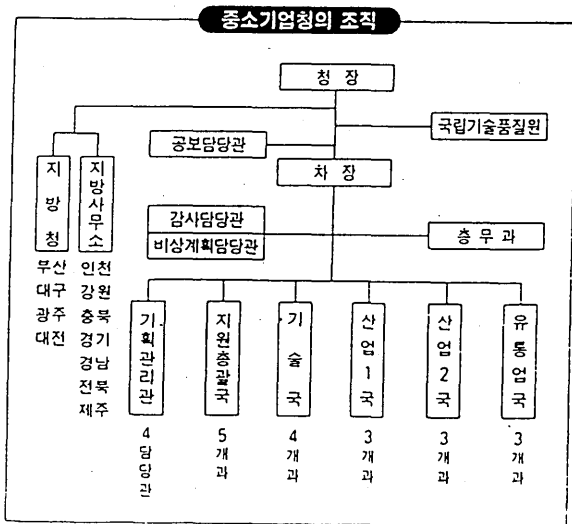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00여억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소규모 점포의 시설 현대화를 도모한다.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4대 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의 집배송 단지 외에 '96년중 4개 단지(곤지암, 시화, 창원, 주안)의 추가건립에 292억원을 지원하는 등 공동물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도록 한다.

### (3) 중소기업청 신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실성과 전문성 및 급변하는 경영·기술 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집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현장 밀착적인 지원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지원효과를 거둘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신설되면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기술개발 지원과 경영혁신 교육 및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96년 2월중에 개청한다.



## (4)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어업인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현장농정(現場農政)을 구현하고, 노력하고 일한만큼 평가받는 '신뢰농정'을 정착시킨다.

농어촌 지도자와의 순회 간담회, 불편신고센터 활용, 장관실 직소(直訴)창구 개설 등으로 농어촌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는 상향식 농정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신규지정(직과기계 지원 등)하고 농어촌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들어 주기 위해 '96년에도 인공 씨감자 생산기술 등 50건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96년 상반기에 그동안의 농어촌 투자실적을 종합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57조원의 투자사업이 농어업인의 피부에 와닿게 내실화한다. 중앙 → 자치단체 → 마을 단위의 교육·홍보 체제를 세우는 한편, 57만명을 대상으로 한 영농설계교육을 통해 농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넓혀나간다.

농어촌 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방센터 및 경영상담실로 운영함으로써 품목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내외 농림수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 (5) 농수산 식품의 품질향상 대책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농수산물의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한다. 종자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우수종자 관리와 보급체계를 강화하고 저독성(低毒性)농약 및 비료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기반을 다진다.

'96년부터 쌀·사과·배·딸기·배추 등 20개 품목은 농산물검사소가 재배와 출하단계에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무공해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는 등 안정성의 등급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소비자의 신뢰기반을 넓히기 위한 품질차별화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90개 품목)하는 '품질인정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외국산과 구별되도록 277개 국산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품질에 따른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다.



수출농어업 시대를 적극 뒷받침한다. 경쟁력있는 수출 전략 품목별로 생산단지를 정비, 내실화해서 생산·선별·저장·가공·포장 등 일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김치·인삼 등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 1차로 일본 도쿄에 해외농업무역관을 '96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역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검역기능을 과학화·신속화한다.

## (6) 식품 위생관리 강화 대책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어떤 음식이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식품 기준과 규격을 선진국 기준에 접근시키고 식품 위해요소 허용치도 국제수준에 맞게 고친다. 범람하는 건강식품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비하여 확고한 정책을 세운다.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별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로 영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수입식품의 검사 결과를 전산화할 것이다.

식품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확대와 주민신고 방법을 제도화해 국민에 의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업자 스스로가 불량식품을 폐기하는 리콜(Recall)제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1·2차 식품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분명히 하는 등 식품관리업무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 3. 核心課題의 持續的 改革

#### (1) 金融·부동산 실명제의 정착

장기적 실천계획으로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확대, 신용카드 이용도 제고 등 지급결제 수단의 다양화로 금융거래의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해 금융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부동산도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관행이 정착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부동산 값이 안정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자료처리 능력을 높이고, 금융소득 본인 통보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실명제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기관별로 금융실명제 전담요원제를 차질없이 운용하는 한편 실명거래 개선내용 등을 적극 홍보한다.

금융기관의 자체교육과 실명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감사·감독을 강화하여 기존의 명의신탁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차질없이 실명전환하거나 팔도록 하며 전환실적을 매  
월 점검한다.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  
에 대한 증여의제과세(贈與擬制課稅) 등 세제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2)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

깨끗한 행정과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등의 노력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나 일부 취약 분야의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다.

이에, '기강' 과 '사기' 의 적절한 조화로 공직사회의 긍지를 높이고 규제완화와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단기적인 실천계획으로 '96년 2월까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개혁' '역사 바로세우기' 및 의식과 행태쇄신 등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부조리 취약 분야와 취약 시기에 점검반을 수시로 가동해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비위 공무원은 엄벌하되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가벼운 과실은 관용한다. 처우개선 4개년 계획 및 보완적 처우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복수직급제의 확대, 하위직 정원의 상위직으로의 조정 등 승진 적체를 완화해 나간다.

장기적으로는,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  
직자 윤리제도를 정착시키고,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하여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한다. 또, 성실한 공  
무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대하고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  
한다. 또, 승진 적체를 완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다.

### (3) 공명정대한 15대 총선관리 대책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있는 행정추진을 자제한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선거관계 금지행위를 준수토록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장관공한' 을 이미 발송한 바도 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4,046개 기관에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3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둔다. 112신고센터를 '선거사범 신고센터' 로 활용하고 선거경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선거를 철저히 단속한다.

또, '96년 3월 20일 내무·법무장관 공동담화문을 일간신문에 발표하고 반상회보에 '공명선거 홍보란' 을 두어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를 위해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허위신고자,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전국 순회 선거관리 교육 실시와 '선거인 명부' 전산자료도 정비한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지원단' 을 선거종료일까지 내무부, 시·도, 시·군·구에 설치, 운영한다.

## (4) 경제·사회 부문 규제의 적극 완화

장기적으로 미국·뉴질랜드·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일선 집행기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소극적인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연구기관 합동의 '경제행정 규제 작업반'을 운영하고, 금융·대출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하는 등 자금조달과 토지이용 및 개발, 법정 의무고용제도 등 업계에서 제기하는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규제개선 사항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법령제·개정시 비용과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입안자를 공개하는 등의 '규제실명제(規制實名制)'를 활성화시킨다.



## (5) 지속적인 세제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장기적 실천계획으로는,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稅制)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한다. 즉, 근로소득자와 여타 소득자간의 세부담 공평성을 높이고 토지세제의 개편 등을 통해 재산과세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해 대외경쟁력을 높인다.

단기적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납세 불편이 없게 한다. 또,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처리 능력을 높이고 제도 금융권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부동산 등 실물투기 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중소기업과 자본재산업의 육성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物流)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의 정착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상속세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산관련 세제를 개선한다.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세계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관세 등 관세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한다. 이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공평한 과세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게 된다.

## 4. 삶의 질」向上을 위한「生活改革」

### (1) 안전문화의 확립

지난 몇년 동안 경험했던 대형사고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내무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재난위험 시설을 지정하여 책임관리제와 안전점검 체계를 확립하며, 위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각 보수·개축·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련 법령을 정비, 보완하고 건설제도개혁을 추진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근본적으로 시정토록 하며,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주요 정책 개선 19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며, 긴급구조와 구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119구조대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를 완벽하게 보강하는 한편 정보체계를 현대화한다.

가정·학교·직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익광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건설·가스·전기·교통 등 분야별 안전문화 의식교육을 강화한다.

## (2) 민생치안의 확립대책

신도시 및 인구급증 지역에 3개 경찰서와 9개 파출소를 신설하며, 치안 부담이 과중한 서울의 185개 파출소에 3부제 근무를 실시하여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현재 도시지역 파출소에만 배치된 112순찰차를 면(面)단위 파출소에까지 확대배치하고, 휴대용 조회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치안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문자동분석기 등 첨단 수사·감식 장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전라남도 장성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본소를 개소토록 하며, 유전자분석실을 확대 개편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 즉 학교폭력, 조직폭력, 마약사범, 어린이 및 여성대상 범죄, 차량이용 범죄, 강·절도 등 유형별로 범죄단속 대책을 세우고 범죄의 맥을 잡아내는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학교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최단기간 내에 근절토록 한다. 한편, 범죄신고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억제력을 극대화한다.

### (3)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

일반 복지욕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 예산은 지난 4년간의 재정증가율(12.3%)에도 못미치는 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150만 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사회보장제도, 민간 부문의 복지참여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이 제시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구체화시킨다.

'98년까지 취약계층에게는 최저생계비의 전액을 보조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시책 강화를 목표로 하여 '96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액과 노인 및 장애인 수당을 인상하고, 인문 고교생까지 학비지원을 확대토록 한다.

의료보험의 급여기간을 종전의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CT(컴퓨터 단층촬영)급여를 실시하며, 도시자영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연금확대 모형을 개발한다.

민간 복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 민간 모금사업 등을 적극 지원, 권장한다.

## (4) 교육개혁의 추진

창의적이고 인간성이 충만한 인재를 양성하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95년에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48개 개혁과제 중 '96년에 40개 시행)하여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종합생활기록부를 전면 도입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수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환경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추진한다. 대학자율화를 완전 정착시키고 대학설립에 준칙주의를 시행하며 교육 역량과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신입생 선발방법을 조기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법을 전면 개편하여 교육개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지침, 훈령 등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교육개혁을 뒷받침한다.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판단 아래, '96년을 '교육개혁 착근(着根)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교육의 새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 반영하여 온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개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7월중 '교육개혁박람회'를 개최하여 변화와 개혁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5)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개발 추진계획

'70년대 이후 주거·공단용지 등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토지의 개발·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산지 등이 감소하였고,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보완장치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공단, 주택단지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3차 국토개발계획의 수정계획에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훼손방지에 그치지 않고 개발을 통한 환경창조라는 적극적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각종 토지이용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연환경 영향평가를 정밀 실시하고, 조사결과 보고와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사전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뒤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한다.

사회간접자본, 도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환경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생태학적 모델을 정립하고 도시별 녹지총량제를 도입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또, 하천상류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완벽한 환경처리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간척, 매립사업, 유류유출에 따른 연안역(沿岸域)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연안역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한다('97년중 연안역관리법 제정 예정).

## (6) 문화·체육 시설의 대폭 확충

문화·체육 시설이 없는 문화의 소외지역을 일소하고 관광·청소년 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여가이용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63개소뿐인 지역문예회관을 시·군·구 단위로 1지역 1회관을 건립하고, 시·도 지역에 국·공립 미술관 및 대중공연장을 각각 1개소씩 건립하며, 현재 318개소인 공공도서관도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세우도록 한다. 또한 182개소인 자연사박물관 및 전문박물관, 미술관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킨다.

지역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49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마다 1개소 이상의 체육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고, 시·군 단위로 총 501개의 운동장·체육관·수영장을 각 1개소씩 세운다. 군 단위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1개소, 시·군·구 단위 1주민체육센터를 신규로 추진한다. 민자(民資)에 의한 골프장·스키장·종합체육시설의 확충도 적극 권장, 지원한다.

청소년회관·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출신의 도시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9개소를 대도시 지역에 신설하는 등 청소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숙박시설을 해마다 5,000실씩 총5만실을 증설하고, 중요 문화권별로 국민관광단지 및 노인휴양촌을 각 5개소씩 조성하며 서울에는 컨벤션단지 1개소, 지방에는 컨벤션시 1개시를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책으로서는 신축 대형건물의 문화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산업단지 내에 종합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고 개발제한 지역 내에 문화시설의 건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7) 어린이를 위한 제반 시책

전자유기장·당구장·여관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1,744개소의 학교 주변 유흥오락업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들 유흥업소의 변태영업 등을 강력히 예방단속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 감시기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할 것이다.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토록 한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내 상습폭력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선도제(善導制)를 도입하고 학교담당 지정검사제를 운영하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학교폭력 치유를 위해 건전한 사회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교내 유희교실 및 유희공간을 활용한 트램펄린(어린이 뽀뽀 운동기구), 탁구장, 태권도장, 체조장 등의 간이 체육시설과 함께 체육관과 강당을 겸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자류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택가, 학교 주변 등의 영세식품판매업소와 햄버거·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 (8) 식수원 오염관리 강화

전국적으로 798개소의 취수장 중 407개소만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96년에 5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폐수의 배출허용 기준 등 각종 규제기준 강화와 철저한 준수방안을 강구하고 1조 3,145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60개소를 '96년중에 신설한다. 또, 기초환경시설은 기존 시설의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에는 '물관리 대책본부'를, 지방에는 '물관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갖춘다.

환경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96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을 실시하고, 특별대책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하류의 수혜지역 자치단체의 분담을 확대하고, 연구용역의 실시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방안을 '96년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즉, 지역별 책임감시체제의 구축으로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 기초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불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에 9개 부처 실무국장을 반원으로 하고, 민간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한 '상수원 관리 개선대책 추진반'을 설치·운영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7대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5. 社會間接施設 擴充

### (1)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추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간 초고속 국가망의 연결도시를 22개 도시에서 80개 도시로 확충하고, 대량의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420개 구간에 1,300km의 광케이블망을 구축함으로써 초고속 공중망 구축도 촉진한다. 그리고 공업단지·항만·공항의 일정지역에 위치하면서 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에 초고속 정보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토록 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선도시험망 공동이용센터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공공응용 서비스 개발 대상을 중앙 정부기관에서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고, 대덕의 정보화 시범 지역의 가입자를 400에서 1,000으로 늘린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전자도서관, 정부조달 자동화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6월에는 아·태 정보통신기반 선도시험망 포럼을 개최하고, 대전과 서울에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민의 정보화 인식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종합추진계획의 '96년 연동계획은 3월중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 확정될 전망이다.

## (2)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조기에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활동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화를 유도하여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4분기중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2000)'을 수립하고 4월말까지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확정하며, 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산업계·학계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정보화 관련 '법·제도 정비종합계획'을 상반기중에 마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법적 환경과 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

지역정보화는 지역별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며, 정부는 지역정보화의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기술을 지원하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 (3) 물류 기반시설의 확충

그동안 물류(物流)에 대한 인식과 투자부족으로 물류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제조업 매출액에 대한 물류비율은 미국 7%, 일본 11%인데 비해 한국은 1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물류비용의 절감은 선진도약과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반도를 21세기 동북아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장기계획 아래 2003년까지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시키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

수도권 신공항·경부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 건설을 위한 양대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格子型) 간선도로망을 완비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망을 확충한다. 부산과 광양을 남해안의 양대 컨테이너 중추항으로 삼아 목포신외항, 포항신항만 등 전국 권역별로 신항만을 개발하고 연안해운업을 육성한다.

또, 수도권·부산권·중부권 등 전국 5대 거점별로 복합화물 터미널을 건설하고 대규모 유통단지 지역별로 개발하며, 물류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종합물류정보망의 편성과 물류설비 및 시설의 표준화도 적극 추진한다.

## 6. 世界秩序 能動參與

### (1) 미·일 등 우방국 및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방안

미국과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를 대비한 장기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선린관계를 구축한다. 중국과는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하며, 러시아·CIS와는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는 유대관계 심화에 역점을 둘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는 북한문제와 관련한 공조체계 강화,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고 안보협력을 증진시킨다. 일본과는 정상 및 외무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친선인맥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과는 각종 양자회의 및 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안보리활동을 통한 우호협력을 모색하고 미개척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러시아 및 CIS 제국과는 '96년중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EU와는 ASEM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체결, 공동정치 선언의 조기 채택, EU의 KEDO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제3세계와의 외교는 한·아세안 동반협력강화 및 중남미, 아중동 제국과의 협력증진을 강화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지역의 평화정착과 보스니아 복구사업 참여,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및 무상원조, 청년봉사단, 국제협력 요원 등의 과건으로 신뢰를 확대시킨다.

## (2) OECD의 연내 가입추진 및 국내제도의 정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정회원국 가입이 연내에 성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해운 등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환경보호, 소비자 안전 등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회원 가입 후에는 세계경제 운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OECD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 분야별 OECD전문인력의 양성, 전담 조직의 설치, 정부내 OECD와 관련한 효율적 정보관리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예상쟁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심사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OECD회원국 및 사무국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OECD회원국의 지지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3)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의 대응 방안

'96년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환경, 노동기준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논의와 지역경제협력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하여 통상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업보조금, 지적재산권 등 WTO·협정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원산지 규정 등의 UR 후속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환경·경쟁정책·투자 등 새로운 분야의 규범제정 논의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이행계획에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무역진흥과 산업·과학 및 기술제휴 등의 주요 협력사업을 주도한다.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미래지향적 통상협력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잠재력있는 새로운 시장개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미국·일본·EU·중국 등과는 국별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 제휴를 확대하여 원만한 통상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 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 ?

### 가. 북한의 식량수급현황은 ?

- 지난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경작면적과 7~8월에 있었던 흉수피해 등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해 국내의 평가기관 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94년도 생산량인 412.5만 톤 보다 16.4%정도 감소한 34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의 '96년도 곡물수요량은 기준량대로 배급할 경우 사료·종자용까지 합쳐 총 673만톤 정도로 보고 있으나, 전쟁 및 유사시 비축미 등의 명목으로 22%정도 감량 배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년 추수기까지 부족량은 233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으로 얼마간 배급이 가능한가 ?

- 배급기준량대로 금년도 식량수급실태를 전망해 보면 작년 생산량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배급이 가능하며, 배급공제분과 해외도입분, 비축미 등을 고려하면 배급기간은 보다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물론 금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흉수피해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은 분명하나 당장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거나 북한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그러나 지역별 곡물 생산여건의 차이, 배분체계, 그리고 수송으로 등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식량사정이 조기에 악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 가. 정부차원의 지원문제는 ?

- 정부는 작년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2억불이 넘는 15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그간의 남북관계에서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실로 방대한 규모의 무상지원이다.
- 그러나 북한은 대남태도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대남비방과 비난을 가열화하고, 특히 작년 연말에는 전폭기와 병력을 휴전선에 전진배치 시킴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 이처럼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쌀 추가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 이미 정부는 지난 제3차 북경회담에서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쌀지원 문제가 검토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있고, ▲남북당국간 회담이 한반도 내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대남 비방·중상의 중지 등을 포함한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북한의 식량부족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농기술의 낙후, 비료와 농약부족 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나. 민간차원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문제도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
- 그 결과 2월12일 현재, 담요(1만매), 라면(10만봉), 양말(2만켤레) 등 40만불 상당의 구호물자가 북한에 전달된 바 있다.
-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 아래 북한의 대남비방과 선동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민간차원의 지원이라 할 지라도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여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 되면 얼마든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진진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 다. 국제사회의 지원문제는?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문제와 관련, ▲북한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지원되는 식량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러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지난 한·미·일 고위급협의회(1.24-25) 등을 통해 입증 되었 듯이 우리우방국에 의해 존중되고 있다.
- 지난번 미국이 세계식량계획(WFP)에 200만불을 기탁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소규모의 상징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와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한·미 간에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다.

